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0월13일(월)
통권1호(제1권 제11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공업지구소개 6

함흥공업지구의 지역 인프라 및 산업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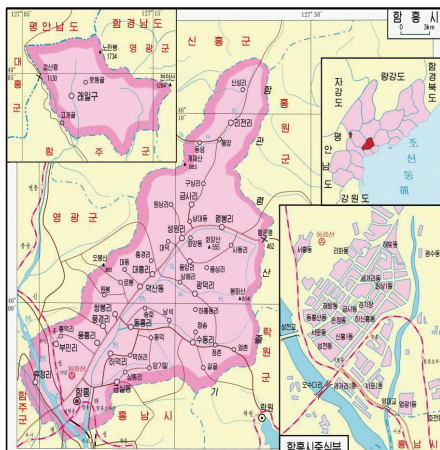
함흥공업지구는 함경남도 도 소재지인 함흥시를 중심으로
홍남을 포함하여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비료 등 각종 화학
공업의 중심지로 제련 및 기계산업 등이 같이 입지하고 있
다. 대표적 도시인 함흥은 면적 556km² 인구 457천명(2004기
준)으로 북쪽은 신흥군, 동쪽은 락원군, 북서쪽은 영광군, 남
서쪽은 함주군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함흥만을 거쳐 동해
에 접해 있다.

경지면적 비율은 함흥시의 18.3%로 논이 36%, 밭이 61%
를 차지하고, 주요 농작물은 벼, 옥수수 등이다. 배추 등 채
소 재배와 공장 폐열을 통한 온실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업은 저산성 산지와 풍부한 사료자원을 이용하여 소, 돼
지, 토끼, 닭, 오리 등을 많이 사육하며, 함흥시에서는 축산
물 생산증대를 위해 현대적 시설을 구비한 양계장도 운영하
고 있다.

수산업은 다양한 어류와 해산물을 채취, 어획하여 이를
가공하는 수산물가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수산 및 어업사업
소와 수산협동조합, 작업반 등이 조직되어 있다. 수산물로는
주로 명태, 도루묵, 정어리, 낙지, 꼴치, 가자미, 까나리 등의
어류와 미역, 다시마 등이 생산되고 있다.

광물자원으로 함흥과 홍남시 일대에 갈탄, 니켈광, 안티몬
광, 형성광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함흥탄광과
홍남탄광 일부지역에서 갈탄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만덕광
산의 유화철, 동암광산의 인회석 등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
되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함경남도 전체적으로는 김덕 일대에 남-아연광상(북한 전
체 매장량의 80%규모)이, 단천시에는 세계적인 마그네사이
트광상(북한 전체의 95%이상)이 있다. 이밖에도 단천과 허천



일대를 중심으
로 동광상, 철광
상, 유화철광상,
인회석광상 및

고원군과 홍원군을 중심으로 석회석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함흥시는 동해안가에 있는 공업도시로 화학, 기계, 건재
등의 제품을 평라선, 신흥선, 서호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수
송하고 있다. 함흥공업지구에는 16개의 철도역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방사성 철도망을 이루고 있다. 도로는 원산-라선
(우암)간 1급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함흥에서 홍남, 락원,
룡림, 부전, 대흥간 2급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항만으로는 북한내 해상운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
교적 현대적 설비를 갖춘 홍남항이 있다. 홍남항은 신포항,
단천항, 라선항, 청진항, 원산항 등 여러 항구들과 연결되어
홍남비료공장의 원료와 제품 및 무연탄, 갈탄, 규사, 농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함흥공업지구의 형성에 최대의 영향을 주는 입지조건은
풍부하고 값싼 전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장진강수력발전소
와 부전강수력발전소가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흥
공업지구는 일제시대부터 주요 군수공업지구의 하나로 발달
하여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가 되었다.

함흥시의 주요공업으로는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방직 및 피복공업, 식료공업, 일회용품공업 등이
있다. 특히 함흥시는 화학원료자원이 풍부하고 전력생산기지
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공업용수, 교통운수 등 자연, 경
제적 조건이 유리해 북한 최대의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 중
심지로 발전했다.

함흥공업지구의 주요 공장으로는 화학부문에 홍남비료연
합기업소(화학비료연간 133만톤), 2.8비날론연합기업소(비날
론 연간 5만톤), 홍남제약공장, 성천강화학공장 등이 있으며
금속 기계공업부문에는 홍남제련소(납 연간 1.3만톤 등), 용
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기계공장, 성천강전기공장 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저 『新북한의 산업(2005년)』 중
발췌.)



홍남항



함흥전기기구종합공장

▶제11호 목 차

이주의 칼럼

한·러 정상회담과 에너지외교 로드맵의 현실성 ----- 2

이주의 주요 기사

“라진-하산 철도 완공시 연간 400만t 수송” ----- 3

“북에 화학비료 보다 퇴비 지원을” ----- 4

유럽기업인투자단, 北과 IT사업 여러 건 계약 ----- 5

“中, 두만강 접경 내륙 항구 건설 추진” ----- 6

통일부 내년 예산, 경험사업비 50% 감소 ----- 7

北철도상 “아시아-유럽 국제수송로에 중요한 고리” ----- 8

정부, 북핵 진전 기류에 ‘남북 사업’ 긍정 검토 시사 ----- 9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핵불능화 재개 ----- 10

North Korea removed from U.S. terrorism list after nuclear agreement--- 11

北朝鮮テロ指定解除、首相への通告は発表30分前 ----- 11

추천논문 / 북한의 외국인 투자 실태와 평가 -----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남북경협 관련 민간, 공기업 초청간담회

▶주제 :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16:00~18:00

▶장소 : 인덕원 대회의실

▶주최 : 동북아 - 북한교통정보센터

●평화재단 제26차 전문가포럼

▶주제 :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14:00

▶장소 : 서울의대 합춘회관 3층 강당

이 주의 칼럼

한·러 정상회담과 에너지외교 로드맵의 현실성

유진숙(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각에서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외교의 쾌거라고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90년대 후반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국적 세계질서를 해체하고 지역헤게모니로 부활한다는 거시전략 하에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을 공세적인 안보전략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친러적인 국가들에 대한 선별적인 자원외교를 통하여 유럽과 CIS 지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기업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에너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대러시아 에너지외교를 한 묶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외교노선이 과연 러시아의 반미 외교노선과 조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 육로를 통한 파이프라인 건설의 현실성이다. 에너지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은 크게는 국가 간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국제정치적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남북 및 북러 관계의 변동에 달려있으며, 그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의 외교상대는 한국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총괄하는 동북아 정세에 의거하여 외교노선을 조절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를 둘러싼 패권경쟁구도를 예의주하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저항을 관조하고 있다. 그레

서 러시아는 북핵 폐기를 기본적인 노선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 행사에는 비판적이며,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첨예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은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북한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 건설은 공급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의사소통 문제일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화에 절대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운데 대 러시아 에너지외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거시적인 동북아전략이라는 맥락 하에서 한·러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러시아에게 에너지외교는 다양한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외교만을 강조한 한·러 정상회담에 러시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08년 한·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백지화로 끝난 2006년 한·러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힘들다.

역동적인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왜소함은 분명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뛰어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한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외교 상대국과 관련 국제정세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파악과 신중하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의 수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 글의 원문은 http://knsi.org/knsi/admin/work/works/iss129_ujs081008.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진-하산 철도 완공시 연간 400만 수송”

-- 10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의 라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철도 개건(개선)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의 수송 능력과 연간 10만 개의 집합(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전했다.

신문은 “이 사업은 철도부문을 비롯한 조(북)·러 사이의 협조범위를 벗어나 조선반도(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과 라선(라진선봉)지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게 될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라진항의 개건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인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의 제거와 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한 새 설비의 반입, 부두시설의 건설, 독의 확장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는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4일 라선시 친선각 앞에서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을 열었다.

北예술단, 생산현장 경제선동 강화

-- 10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은 중앙예술단체는 물론 각 지역의 모든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을 주요 산업시설에 파견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6일 입수된 이 신문 9월29일자에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예술선전·선동대를 통해 “총 3만 832개 단위에서 11만 7천315회에 걸쳐 1천31만 5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내각의 문화성 주관 아래 중앙의 예술단체들은 연초부터 동평양화력발전소,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화장품공장 등에 나가 화술과 성악작품으로 경제선동 활동을 했으며, 직업총동맹 중앙 노동자예술선전대는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탄광들에 파견돼 2만여 명의 광부들을 대상으로 경제선동을 진행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국립민족예술단과 강원도예술단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평양교예단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경제선동을 벌였고, 함경남도예술선전대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경제선

동 활동을 벌여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남경필 “MB정부, 6·15-10·4선언 계승해야”

-- 10월 6일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중진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 팔달, 4선)이 이명박 정부에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6·15, 10·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 계승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6일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두 정상선언 합의정신이 일맥상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6·15, 10·4 선언 계승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4선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처럼 촉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의원은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은 항상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곤 했다”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보다는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 결정되는 점도 짚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원인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의 단절을 의식해서 남북정상간 기존 합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관건”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北·中, 철도화차 반환 놓고 해묵은 갈등 재연

-- 10월 6일 연합뉴스

북중 양국이 국경을 오가며 물자수송에 사용되는 철도화차 반환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중국이 올해 7월부터 북한의 화차가 들어와 물자를 싣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국경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당국이 앞으로 열릴 국경철도회의에서 화차반환 등 철도합의 개정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중국 선양(瀋陽)의 한 대북무역업자도 “중국에서 북한 화차에만 물건을 실어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후 북한으로 물자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철도화물 수송에서 중국의 민간회사 소유 화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화차를 돌려받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화차 미반환을 이유로 북한에 철도협정 파기를 통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북중 양국은 1959년 체결, 1973년에 개정한 북중철도 협정과 매년 10월 양국을 오가며 개척되고 있는 정례 국경철로회의 의정서를 통해 베이징(北京)-평양 국제열차운행과 양국간 철도화물 수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은 일단 "이런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중국의 협정파기 통고는 엄포성에 불과하지 진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중국에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열차가 1주일 4차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고 있고 이중 1차례는 평양에서 선양(瀋陽)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까지 개입된 철도협정의 일방 파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에 화학비료 보다 퇴비 지원을”

-- 10월 6일 내일신문

북한에 매년 수백 억 원어치 씩 지원되는 화학비료를 축분 퇴비로 일부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학비료가 당장은 작물생산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땅을 산성화시키면서 척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황진하(한나라당·과주) 의원은 6일 통일부 국감을 통해 “화학비료는 지속적인 작물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니만큼 북측에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질 비료인 축분퇴비를 지원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정부는 255만톤, 7995억원 상당의 화학비료를 북측에 제공했다. 99년엔 민간 지원분(123억원)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화학비료는 에너지과다 소비형 비료이고 토양산성화를 유발하며 △국내 축산농가들이 과잉 축분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지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화학비료 지원을 고집하는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퇴비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단기적 식량증산 효과만을 염두에 둔 북측 의도 때문이지 북측이 (퇴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며 고 김일성 주석이 현지도 과정에서 퇴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을 예로 들었다. 황 의원은 “퇴비는 물류비가 비싸다고하지만 제품가격은 화학비료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만큼 물류비 증가액을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北 ‘휴대용 노래반주기’ 제작

-- 10월 7일 연합뉴스

북한의 음향기기 생산업체인 메아리회사(전 메아리음

향사)는 TV수상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화면과 반주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제작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무선 마이크 중간에 숫자 버튼이 붙은 모양의 ‘마이크식 화면자료 반주기’에는 1천500여 곡의 화면반주 음악이 저장돼 있으며 노래에 대한 점수 평가, 녹음에 의한 2중창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다. 이 반주기는 속도와 음량, 음정, 잔향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연속연주기능, 악기소리 변화기능, 목소리 변조기능도 갖췄다.

신문은 “임의의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기제는 시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최신 전자기술이 도입된 ‘마이크식 화면자료 반주기’는 음악기재 상점들에서 곧 판매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대북인도지원, YS정부 때보다 적어

-- 10월 7일 연합뉴스

역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부 무상지원 + 식량차관 + 민간 지원)을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7천843원으로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는 1천685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1천685원은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21.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일 뿐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 시발점이었던 김영삼 정부 때의 1천886원보다도 적은 수준이어서 최근 남북 당국관계의 경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실적과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 3조108억원을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3.3~2008.2, 60개월)가 1조8천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대중 정부(1998.3~2003.2, 60개월) 8천557억원, 김영삼 정부(1995.6~1998.2, 32개월) 2천314억원, 이명박 정부(2008.3~8, 6개월) 413억원이다.

이를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7천843원(4천800만명 기준), 김대중 정부 3천565원(4천800만명 기준), 김영삼 정부 1천886원(4천600만명 기준), 이명박 정부 1천685원(4천900만명 기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 남북관계 목표 재천명 ... 이행방안 주목

-- 10월 7일 연합뉴스

정부가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북 핵폐기

의 지속적 추진과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 포함돼 정부의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비핵화는 필수적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핵·개방 3000도 같은 맥락이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 남북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남북간 자본·노동·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나누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프로젝트 추진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한 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이 구상을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반통일 선언’ 또는 ‘전쟁 선언’이라고 적대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평양 락량섬김인민병원 내년 6월 준공

-- 10월 7일 연합뉴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정정섭)이 평양에 건립 중인 종합병원인 락량섬김인민병원이 올해 말까지 외장 공사를 마치고 내년 6월쯤 준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대책 대북지원 재단법인인 ‘섬김’(이사장 윤희구)과 인정건설(회장, 이종근)은 지난 4일 인천항에서 병원 공사 재개를 위한 2억 원 상당의 외장재 등 건축자재를 북한에 보냈다. 재단법인 ‘섬김’의 권용찬 사무총장은 “이번 물자지원으로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병원 건축을 재개할 것”이며 “오는 11월 물자를 추가 지원해 오는 12월 까지 외장공사 등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2006년 8월 평양 락량섬김인민병원 착공식

을 갖고, 지난 3월까지 여섯 차례 병원 건축을 위한 10억여 원 상당 물자를 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기아대책 대표단과 인정건설 건설기술진은 각각 병원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공사를 진행했다.

평양 락량섬김인민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등 6개 과에 76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내년 6월에 준공되면, 북한 평양 낙랑구역 지역주민 5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내 조선족 공장, 北근로자 한시적 고용”

-- 10월 8일 노컷뉴스

중국과 북한의 국경도시에 있는 중국 조선족 소유의 제조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계절별 또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현지에서 제조업을 하는 한 조선족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의 19살~25살 사이의 여성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조선족 소유 공장에 취업시킨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이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숙식제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의 관리 감독을 위해 보위부원까지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문량이 밀리는 3월~5월 사이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조선족 공장이 많다”면서 “중국 근로자들을 쓰는 것보다 언어의 불편이 작아 현지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내 경기가 부진하고 기숙사와 식사까지 제공할 경우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은 데다 중국 당국이 노동허가증 발급을 더는 해주지 않아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기업인투자단, 北과 IT사업 여러 건 계약

-- 10월 8일 연합뉴스

최근 방북한 유럽과 중국기업 투자단이 북한측과 상담을 통해 휴대전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투자단을 인솔한 네덜란드 정보기술자문회사인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가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치아 대표는 “이번 산업시찰 이후 벌써부터 (북한과)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 있다. 유럽기업들이 북한의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곧 여러 개의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RFA는 이번에 방북한 스페인과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기업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평양에서 투자 상담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투자단의 또 다른 기업인은 ISO9001이나 CMMI 인증

을 획득한 휴대전화 동영상이나 오락프로그램을 폴란드와 독일, 중국, 네덜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기술적 배경을 평가해서인지 이번에 북한에 들어간 유럽 기업인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적극 임했다”고 투자단의 다른 한 기업인은 말했다.

“中, 두만강 접경 내륙 항구 건설 추진”

-- 10월 8일 연합뉴스

중국이 두만강 3국 접경지역에 내륙항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교통보(中國交通報)는 8일 ‘지린(吉林)성 교통청이 최근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광촨(防川)에 내륙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왕리(王力) 지린성 교통청 부청장은 회의에서 “지린성 위원회와 성 정부에서는 두만강 개방합작 전략의 추진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내륙항구 건설은 이런 목표 실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내륙항구 건설은 (지린성이) 동북아에서 중심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륙항구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초자료 파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두만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광촨에는 북-중-러 3국 접경을 표시하는 토자비(土子碑)가 있는 곳으로 동해와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광촨에는 1930년대까지 동해로 나가는 항로가 있어 소규모 선박들이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96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각각 국경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두만강 하구지역이 북러 양국의 국경선으로 확정되면서 중국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완전히 잃게 됐다.

北, 대형 대중목욕탕 ‘문수원’ 새단장

-- 10월 8일 연합뉴스

북한은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 대중 목욕탕인 문수원을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보수, 정권수립 60돌(9.9)을 계기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1982년 동평양지구에 세워진 문수원은 개원 이후 여러 차례 소규모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됐다”며 이번 공사로 1층 남녀 대중탕과 야외 물놀이장, 2층 독탕, 가족탕의 타일을 모두 교체하고 바닥 대리석과 계단 난간 등도 새로 바꿨다고 전했다.

천정은 이중으로 설치해 열손실을 줄이도록 했고 ‘면적외선(원적외선)’ 한증칸들도 설치했으며 이발실과 미용실, 식당 등도 새로 꾸몄다. 또 외부 벽면은 회백색 타일과 흰색 타일을 붙여 모양을 냈으며 현관 입구에는 각종 돌 건재들로 장식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1981년 7월 착공, 이듬해 12월 완공된 문수원은 연건평 7천㎡ 규모의 종합 문화위생서비스 시설이다.

평양의 대형 대중 목욕탕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광원(연건평 3만8천㎡, 4층)을 비롯해 북새원(5천여㎡), 락랑원(3천600㎡), 어은원(2천300㎡) 등이 있다.

4년 연속 풍수해 北들녘 오랜만에 ‘풍년’ 기대

-- 10월 8일 연합뉴스

2004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각종 풍수해에 시달린 북한이 올해 여름과 초가을은 ‘무사히’ 넘김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난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방북했던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관계자로부터 “올해는 대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올해 작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연일 노동당 조직을 ‘총동원’해 ‘가을걷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국내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8일 벼 이삭이 패는 시기에 한반도의 날씨가 좋았고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북한의 곡물 수확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그러나 올해 남측의 비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비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풍년을 낙관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벼 수확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좋겠지만 옥수수 농사는 시비가 적었을 뿐 아니라 수확기 가뭄이 들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풍년은 아니고 지난해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추정했다.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의 김운근 원장 역시 “비료 30만t이면 곡물 90만t의 증산 효과를 보는데 비료 부족이 문제”라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실시하는 현지 작황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북한의 올해 작황을 예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에 농업 전문가 6명을 북한에 파견,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등 6개 지역에서 작황을 조사,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美 전문가 “미국, 북미 군사회담 수락 가능성”

-- 10월 9일 노컷뉴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

용하는 것을 전제로 북미 군사회담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문가가 말했다.

미북 핵협상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폐기물 시설을 군사회담과 연계하려는 북측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접근과 제한없는 시료 채취를 허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부시 행정부도 군사회담을 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말했다.

이 외교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절충안으로 미국이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군사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 핵폐기물 시설 접근과 시료채취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지난 2003년 이후 북한 군부 장성이 핵 문제와 관련해 힐 차관보를 공식으로 처음 만난 것은 상당히 의 미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핵협상에서 북한 군부가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 측은 지난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검증안에 핵폐기물 시설의 포함 문제를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악화, 기상 예보에도 ‘악영향’

-- 10월 9일 노컷뉴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의 기상정보 교류가 중단돼 예보 정확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된 2억 상당의 자동기상관측장비와 황사관측장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의 불통이 기상분야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열릴 예정이던 남북 기상당국자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지난해 12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남북간 기상업무 협력 내용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한 황사 관측장비의 기상 정보를 활용하면 국내 황사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인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남북간 기상업무 협조체제가 그 틀을 채 갖추기도 전에 정치적 문제로 정체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일부 내년 예산, 경험사업비 50% 감소

-- 10월 9일 연합뉴스

9일 통일부는 내년 일반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8.8% 삭감된 1,144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난해 보다 8.6% 증가한 1조 5,086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나 10.4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지원 쌀 40만톤(3,520억원), 비료 30만톤(2,917억원)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험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

쌀의 경우 올 초 톤당 420달러 수준에서 내년 초에는 약 800달러 정도로 두 배 가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료이 경우도 3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될 것을 예상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쌀·비료의 제공 방식에 대해서 9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무상지원 입장이지만 국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일단 예산에는 차관으로 반영됐고, 무상지원에 공감대가 완벽하게 확산되면 국회에서 무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쌀·비료 지원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예산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하게 되고, 이와 연동돼 대북 경험사업비가 50.7% 감소하게 됐다.

통일부는 “대북 경험사업은 ‘경협 4원칙’(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추진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사업 재검토 등으로 08년 6,101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50.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되 개성공단 기반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 공사 등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2단계 공사 관련 예산이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관련 예산 등 본격적인 투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른 추가 예산 수요발생시 여유자금(2,530억원)으로 충당”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다. 이에 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억원에서 1억 9천만원으로 90% 증액했으며, 새터민 지원 예산과 하나원 관련 예산 등도 늘어났다.

“北 소형 핵탄두 보유 가능성 전제로 유사 상황 대비 중”...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 10월 9일 뉴시스

윌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이번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나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근거로 북한이 핵탄두를 현실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이 핵 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대북 제재조치 6개월간 재연장 방침

-- 10월 10일 뉴시스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 각의를 열어 오는 13일 기한을 맞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6개월 동안 연장할 방침이라고 지지(時事)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에도 착수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점에서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대북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자 화력선 환경보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를 발동했다.

이후 사태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은 작년 4월과 10월, 올 4월에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시켰다.

각의가 이번에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하면 네 번째가 되는 셈이다.

“외부지원 北라면공장에 자생 업체 망할 수도”

-- 10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외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라면공장이 북한이 자체 운영하는 라면공장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결핵퇴치 사업을 펴고 있는 유진벨재단의 스테판 린튼(58.한국명 인세반) 대표는 9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호암교회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정부기구(NGO)들이 대북지원 활동을 할 때 “머리를 쓰지 않으면 상징적인 것에 그치거나 비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례를 들었다.

린튼 대표는 “돈을 잘못 쓰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무턱대고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현지의 사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라면공장보다 외부 민간단체의 무상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라면공장을 비교 사례로 들면서, 외부 지원을 받는 공장은 운영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값싼 라면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라면공장의 가격 경쟁력을 앗아가 부도를 내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겠다는 NGO가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작정’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10년 넘게 남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펴온 린튼 대표는 “대북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마음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며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를 역설했다.

北철도상 “아시아-유럽 국제수송로에 중요한 고리”

-- 10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의 전길수 신임 철도상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의 개선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심화”돼온 양자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보도했다.

전 철도상은 지난 4일 라선시 친선각 앞에서 자신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철도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공식은 북한과 러시아간 “쌍무적인 대규모 협조 실현의 첫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54km에 달하는 라진-하산간 철도구간의 개선은 길지 않은 노선이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육상수송로를 새로 정비하는 것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대륙간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수송 통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말했다.

전길수 철도상은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의 개선 사업이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라선시는 러시아와 직접 잇닿아 있는 지대이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깊다”며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조(북).러 두 나라 사이의 내왕이 증진될 것이며 쌍방의 사회, 경제적 협조에 이바지하는 라선의 지대적 특성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비료, 비닐 적게 쓰는 종자 개량 주력

-- 10월 10일 연합뉴스

농자재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영농관련 연구·교육기관들이 비료나 모내기용 비닐을 적게 쓰면서도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종자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방송은 농업과학원 산하 벼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와 농업과학분원들에서는 “불리한 자연조건에 대한 견딤성이 강하고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을 확대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남포농업대학과 계웅상사리원농업대학 등 교육기관들도 간식식 논에서 모내기용 비닐을 적게 쓰면서도 모활착률을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토양학연구소 과학자들도 최근 토양과 기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소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및 첨단기술에 의한 토양도(土壤圖) 작성 방법을 개발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오라스콤 “북한 휴대전화 올 연말 개통 예정”

-- 10월 10일 노컷뉴스

북한에서 올 연말 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밝혔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업권을 따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 5월, 음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올 하반기 내에 정식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오라스콤사는 “음성에 국한된 시험에 성공한 이후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이동통신 연결망과 휴대폰의 음질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원래 추진하려 했던 동영상과 음악을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라스콤사는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FP “현지 작황조사 뒤 韓정부 식량 지원 합리적”

-- 10월 10일 노컷뉴스

세계식량계획이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현지 작황 조사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종전의 즉각 지원 입장을 바꿨다.

세계식량계획 레나 사벨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정부의 조속한 식량 지원을 촉구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현지에서 진행할 작황 조사의 결과를 보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확한

식량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벨리 대변인은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에서 올해 16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정부가 실제로 얼마만큼 식량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현재 50만 톤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이 불투명하고,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식량계획으로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북핵 진전 기류에 ‘남북 사업’ 긍정 검토 시사

-- 10월 10일 뉴시스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10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 문제 진전에 따라 그것에 맞춰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정부가 천명해 왔던 입장에 맞게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 공영’ 대북정책 실현 수단 중 하나인 ‘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해 핵 문제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중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다.

김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북한에 투자될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은 다 책정돼 있다”며 “또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유 자금이 충분하냐’는 지적에 대해 “(그 자금이라도)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돼 그런 사업들에 (자금이) 다 투입되고, 오히려 자금이 더 필요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호전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北 노동당창당 기념사설 “경제 총공격전” 독려

-- 10월 10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맞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

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고 있고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의 돌파구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신문은 특히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갖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사업을 적극 다그치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처럼 내부예비(유휴자재)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핵불능화 재개

-- 10월 12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으며, 북미간 핵검증 합의의를 추진하기 위한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 지원 역할 이행, 시료(샘플)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 등이 검증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매코맥 대변인은 북미 합의사항을 6자회담에서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계, 남북협력 활성화 기대

-- 10월 12일 연합뉴스

경제계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데 대해 북미 및 남북관계 호전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다양한 대북사업 전개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12일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내려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에서는 다양한 경험 및 대북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기숙사 건설과 인력수급 문제, '3통(通) 문제(통행, 통신, 통관)'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북이 쌓여 있다"며 "이번 조치로 남북간 긴장이 해소돼 현안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WP "美, 北의 2차 핵실험 우려로 테러지원국 해제"

-- 10월 12일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우려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퇴임 100일을 앞둔 부시 대통령의 임기내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결국 부시 행정부는 핵시설의 원상복구 방침을 밝히며 압박전략을 구사한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달래기'에 주력했지만,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테러행위'라고 비난하며,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사실을 소개했다.

North Korea removed from U.S. terrorism list after nuclear agreement

북핵 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거되다 -- 10월 11일 LA Times

출처:<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ashingtondc/la-fg-norkor12-2008oct12,0,7143632.story>

The Bush administration Saturday removed North Korea from it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fter Pyongyang agreed to allow inspectors access to declared nuclear sites, in a deal that drew quick criticism from conservatives.

After weeks of rancorous negotiations, North Korea agreed to resume the disabling of its Yongbyon plutonium plant and permit international inspectors to return.

Although U.S. officials hailed the deal as an important accomplishment, the agreement left unresolved what happens if inspectors seek access to suspicious sites that the regime has not declared. After demanding in negotiations to be given access to other areas, U.S. officials settled for language saying that entry to undeclared sites will be granted based on "mutual consent."

.....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북핵에 대한) 감찰관의 북핵 시설에 대한 재 접근에 합의한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거했으나 미 보수파의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함. 수주 간 협상에 의해 북한은 불능화 조치의 계속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 감찰관의 복귀에 동의함.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영했지만 맥케인 공화당 후보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원은 우려를 표명하였음.

NKorea urges all-out struggle to rebuild economy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한 총력투쟁을 촉구하다

-- 10월 11일 AFP

출처:<http://afp.google.com/article/ALeqM5iWheOxd4AWkE8Q7h78wk7EZK-hDg>

North Korea on Friday urged its impoverished people to wage an all-out struggle to rebuild the economy, but made no mention of any appearance by leader Kim Jong-Il on a major anniversary.

Kim reportedly suffered a stroke in mid-August, and analysts are closely watching reports about Friday's anniversary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to see if the reclusive leader makes a public appearance.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early Saturday said Kim recently visited a female military unit and observed an artillery drill by the women of KPA Unit 821 but did not reveal when.

It said he was accompanied by two North Korean generals and took photos with the troops.

State media said last Saturday that Kim had attended a student football match but released no photos or video footage. It was the first report of any public appearance since August 14.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창건일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가운데 경제재건을 위한 인민의 총력투쟁을 촉구함. 하지만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군부대를 시찰하고 군 장성과 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北朝鮮テロ指定解除、首相への通告は発表30分前

북한 테러지정 해제, 수상에게는 발표 30분전 통고

-- 10월 13일 요리무리신문

출처:<http://www.yomiuri.co.jp/feature/20080115-899562/news/20081012-OYT1T00424.htm>

麻生首相は12日、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テロ支援国指定を解除したことについて、一定の理解を示すと同時に、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日本の取り組みに変化はないとの立場を強調した。

しかし、解除に至る米側の対応に政府・与党は衝撃を隠せず、野党からは日本政府のこれまでの対応を批判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麻生首相は同日、浜松市内で記者団に、「(核問題が)動かない状況のまま置いておくより、きちんとやった方がいいと(指定解除に)踏み切ったと理解している。一つの方法だ」と述べた。拉致問題への影響は「全然ない。テコを失うことはない」と強調した。だが、その言葉と裏腹に、日本は米国に振り回された。.....

아소 수상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자세는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제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모습에 정부·여당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고, 야당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아소 수상은 浜松 시내에서 기자단에게, "(핵문제가) 진전 없이 방치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게 하려고 (지정 해제를) 단행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납치 문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 지렛대를 잃을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일본은 미국에 휘둘렸다.

나카소네 외상은 10일 밤 라이스 장관과의 전화 회담 후, "이번 주말에 해제는 없다"라고 언명했다. "대통령은 한일과 핵 검증의 기본 내용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라이스 장관의 말을, "한일이 납득할 때까지 해제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외무성 간부)로 받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일본은 미국의 설명에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미국은 이것을 조건부 용인으로 이해했다"라고, '엇갈림'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추천 논문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 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배종열(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북투자는 중국기업과 EU기업이라는 양강 구도로 재편되었다.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은 1990년대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그램」 발표와 나진·선봉 지구의 특수 지정 등 북한의 태도 변화 등에 의해 촉발되었다.

EU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 제고는 2001년 5월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페르손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 이후 EU와 북한의 정식 수교가 이루어졌고, 기업의 대북진출도 본격화 되었다.

EU기업의 대북진출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대북 프로젝트 진행은 10년 이상의 대북경험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독일계 자본이 주도하던 북-EU 간 경제협력의 7·1조치 이후에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앵글로색슨계 자본이 주도하는 양상이 되었다.

셋째, 북한은 호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기본적 인프라 부족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시장접근의 제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투자 영역의 확대와 규모의 대형화를 보이는 중국기업의 대북 진출은 두 가지의 특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경제 중심성장축의 외연확대라는 점이다. 대북 진출에서 북한과 밀접한 연변조선자치족 기업이나 동북 3성의 기업보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남방의 온

주상인계가 약진을 보인다.

둘째, 기업의 대북 진출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북 협상과 인프라 건설 등의 지원이 그것인데, 통화강철집단의 무산철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길림성상무청이 전면으로 나섰던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역설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되기도 한다. 2005년 북-중간 광산 개발, 제철공업, 항만 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에 대한 원조 약속에 따라 진행되던 무산철광, 나진항 개발, 용동탄광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유탄을 맞아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이 이를 입증한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2년 이후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양 방면에서, EU는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신장시켜 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틈새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과 EU기업의 사례는 우리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인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에 게재된 것으로, 원문은 http://www.koreaexim.go.kr/kr/sn/m04/s01_read.jsp?nRegNo=3&nSSecNo=108&nSSecNoCategory=424&clnListRegNo=3&sFileNm=&BookItems=674에 첨부돼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기초공업부문의 성과' 선전

○ 10.8. 중앙통신은 “조선의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강계청년, 태천,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순천지구 청년탄광련합기업소내 탄광들에서 매장량이 풍부한 탄밭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날마다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어 통신은 “금속공업부문에서도 조선식의 철 생산 방법을 완성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으며,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등에서 주체적인 철 생산 방법을 도입하고 기술재원을 다그치면서 철강재생산을 늘이고 있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전기로 현대화공사를 끝내고 시험생산을 진행하면서 당면한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